사법농단 영장 '줄줄이 기각'에 檢-法 신경전

檢 "제식구 감싸기?" vs "객관적 평가 결과" 法

法, 檢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각
잇딴 논란에 法-檢 묶기 주장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파장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이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한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 구조 개혁의 내용과 속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개에는 국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입법·행정·언론 상대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와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법조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방안도 있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관련 문건 작성은) 국민 권익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法·檢 신경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부장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언론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법원은 2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 특정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되고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검찰 측 영장 청구에 흠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최근 영장심사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

검찰을 의식한 대응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을 행정부에" 對 "사법근간 봐야"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에선 이참에 법원을 검찰과 같은 행정 체계로 묶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삼권분립을 주창한 몽테스키외의 모국 프랑스처럼, 법원을 행정체계상 법무부에 귀속시키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한다"며 "독립 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에서 인사권을 쥐고 법원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인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권은 법원 스스로 가지다 보니, 사법부가 잇속을 챙기려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거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정서상 문제로 프랑스 법치주의 대신 독일의 법 체계를 받아들였고 우리 사법의 근간으로 이어졌다"며 "사람의 신체 일부를 치료할 때 몸 전체에 미칠 영향을 따지듯이, 지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년간 쌓인 헌법체계의 근간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당장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 해도 원칙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본다"며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를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다른 인원으로 바꾸는 식으로 시간을 갖고 해결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 이범종기자 joker@metroseoul.co.kr

"농촌 빈집·유휴시설, 어떻게 사용할까"

농식품부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시설 등 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

공모 신청방법은 읍·면 등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해 예산절감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이나 법인이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모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자료의 요건 등을 검토 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으로 이메일 접수하게 된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최우수상(1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4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한국농촌계획대전 수상작과 함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모전 결과 향후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관련 사업추진 시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폭염 속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주의보

연 평균 50여 건 화재사고 발생
전선 절연·인버터 과열 등 점검

정부가 최근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 평균 50여 건이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화 설비는 8월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17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10년 이상 가동 노후화 설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유발항목 발견시 현장조치, 보완지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 실시 이외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유토이미지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43만622개소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연평균 5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건당 약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절연, 인버터 과열, 접속함 결함 등 설치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관련 설비·부품에서 기인한 사고가 78%(19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3건의 화재가 발생해 1억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태양광 구조 안전 및 지반 검사도 함께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어촌 꿈꾸는 도시민을 위한 '귀어귀촌 박람회'

해양수산부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어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2018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 귀어·귀촌 관련 상담 실적이 1413건이었던 반면, 박람회 이후 하반기 상담 실적이 4263건으로 크게 증가해 박람회가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어촌, 활력바다' 라는 주제로 해수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어항협회, 수협 등 다양한 기관들이 210개의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귀어·귀촌 관련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귀어귀촌종합관'과 귀어로 성공한 청년귀어인을 만나볼 수 있는 '청년어촌관', 귀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귀어닥터상담관' 등의 전시관도 마련된다.

2017년 귀어귀촌 박람회 현장 모습. /해양수산부

특설무대에서는 귀어·귀촌을 원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천해양식·내수면양식·유통·관광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상담과 강의가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식약처, 가정간편식 '해썹' 인증 의무화

식품당국이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수요가 급증한 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매출액 1억원 이상에 종업원 6명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가정간편식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썹(HACCP)을 적용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활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등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스테이크류 간편식 시장은 2016년 129억원에서 2017년 202억원으로 늘었다. 냉동 피자 시장은 2016년 270억원에서 2017년에는 890억원으로 급증했다. 핫도그도 2016년 340억원에서 2017년 430억원으로 상승됐다.

그러나 식품제조업계의 위생관리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99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13곳), 제조 일자 허위표시(6곳), 기준규격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15곳), 표시기준 위반(36곳), 원산지 허위표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22곳) 등이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